社 說

구성원 의견수렴통한 학사일정 돼야

—중간고사 연기에 따른 문제점

지난 8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간고사가 연기됨에 따라 학내구성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총학생회측의 요구로 오는 22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된 이번 조치는 8일 있었던 고 이수병동문추모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19기념주간과 일정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특히 수원캠퍼스의 경우 예비강의제실시로 인해 본격적인 강의가 늦게 시작되어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에는 너무 강의기간이 짧았다는 것도 그 한 이유로 작용했다 한다.

그러나 이번 연기에 대해 우리는 우선 중간·기말고사등이 매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변경되어온 상황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학교측은 매년말에 그 다음해의 학사일정을 수립하고 개강과 더불어 학내에 공표한다.

학생들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들은 이 발표를 접하고 그 해의 목표와 계획을 학사일정에 맞게 각자 개개인이 구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정이 연기 또는 변경될 경우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들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매년 학사일정이 변경되고 학내구성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학사일정계획표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단순한 일정나열식의 도식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측은 나름대로 예년의 변경되었던 이유등을 분석하여 일정을 계획했다고는 하나, 4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중간고사일정이 88, 89년의 경우 각각 4월말, 5월초로 연거푸 연기된 실례를 살펴보았을 때 중간고사연기로 또다시 점철된 이번의 학사일정계획은 학생회활동등 다른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역시 학사행정에 학내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대학자치협의회, 대학발전위원회등과 같은 기구의 건설을 89년도 부터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의 가장 기본이되는 학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임무태만에 속한다.

또한 매년 학사일정을 수립할 시 총학생회의 사업등 개괄적인 1년사업계획을 먼저 수립, 의견을 개진하여 일정을 학교측과 논의하는 것과는 달리 매번 이맘때쯤이면 일정연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총학생회의 태도야말로 시정되어야 하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간고사가 연기된 현시기는 1년동안의 학사일정에 있어서 4분의 1의 일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앞으로 4분의 3이라는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다.

이번 중간고사일정연기로 인해 앞으로 실시될 기본적인 일정들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정권과 민민세력 싸움의 연장선

—계속되는 대학신문 탄압을 바라보며

새학기가 시작된지 거의 2개월째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각 대학신문사에서 잇다른 파업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명지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광운대는 주간교수와의 의견대립속에 제작거부 또는 제작중지에 돌입하였고 서강대, 외국어대는 광고계약문제로 충돌, 현재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서울교대, 서울여대등도 지면의 일부분이 삭제, 또는 기획이 바뀌어진 상태로 신문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각 사 탄압의 공통적 특징은 예전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필자, 편집장의 구속등 직접적인 탄압에서 개별사의 일상적인 문제로 분화한 형태로 탄압의 양태들이 전화되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신문사에서 벌어지고있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던가, 아니면 개강이 되면서 의례히 있을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식의 사고는 사태의 현상적 측면만보고 본질적 측면은 간과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올들어 각 신문사별로 주간교수들의 태도 역시 예전의 검열을 조금 강화하는 선을 넘어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요구 즉 사설권의 교수로 이양, 편집계획서의 검열강화, 임의적인 편집위원회 신설, 필자선정 개입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주간교수도 학교규정집등에 나타나 있는 사칙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각 신문사마다 학생기자의 주체적인 편집풍토가 정착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비민주적인 사칙을 이용한 내부적인 탄압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내의 '사규'나 '주간교수와의 암묵적 합의'로 신문작업의 원칙을 삼아왔던 최근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당혹해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편집자율권 싸움 속에서 '민주사칙쟁취'가 머리구호로 나오는 것들은 그에 대한 좋은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4개사 소속사중에서 21개사가 사칙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사칙의 경우 대부분이 사문화되어있고 주간교수와 편집장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존해 신문이 제작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어떠한 싸움이든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지, 본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고 대응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비록 형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각 신문사별 차이, 차별이 존재 하므로 각 신문사의 실정과 역량에 맞게, 학생들의 호응과 정서정도를 정확히 감안하여 싸움의 전술을 잡아야 할 것이다.

92, 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각개격파하는 현정권의 탄압술책이 학우들과 학생회를 올바로 이어주고 사회변혁적 기능을 갖는 대학신문에도 적용되어 학교와 학생측의 문제로 오도시켜 정권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음모라고 보여진다.

결국 대학신문의 현재의 싸움은 형식적으로는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사칙개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현정권과 민민세력과의 싸움인 것이다.

대학신문이 얼마만큼 학내의 독자들과 긴밀히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 모든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 질것이다.

언론은 그 상품이 '관념적인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 생산자'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언론은 자본주의 하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냄으로써 지배계급의 지배체제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도 모순구조에서 파생된 분단이데올로기·향락·소비지향적 이데올로기 등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켜 지배권력의 권력유지의 도구로써 작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매주 제도권신문들을 비교·분석·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제도권언론의 본질을 실증적으로 파헤치고,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매체비평

UN단독가입, 관변적 논평에만 그쳐

지난주 신문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졌던 기사들은 현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사들과 현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상승하고 있음과 그것을 토대로 UN단독가입을 국제사회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난 10일자 각 일간지에 적어도 2~3단이상으로 다루어졌던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데일러 부소장의 강연기사를 보면 5년내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고 있어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솔깃하게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년내의 통일을 운운하면서 여전히 냉전체제의 논리인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군을 일부감축하되,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배치돼야 한다고 밝혔음이 보도되고 있다.

미군의 군사정책과 관련 4월12일자 한겨레신문의 톱을 장식했던'미 군사력 평가보고서' 기사를 보면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강도에서 고강도에 이르는 전투가 1백2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고, 또한 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일간지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 별다른 논평이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UN가입 문제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4월10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 "유엔가입 문제가 결국 남북한의 대립적인 외교노력으로 치닫게 된다면 이야말로 힘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밖에서 그렇게 소모시킬 힘이 있다면 우선 안으로 모아 고위급회담의 진전에 모두 쏟아야 한다"라고 논평한 반면 조선, 중앙, 한국등의 일간지에서는 유엔가입이 '분단의 해결고리'라는 식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무언으로 일관해왔던 일간지들이 북방정책의 성과(?) 부분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지. 요즘 일간지들의 보도 태도는 분단이데올로기의 대량 유포에 다름아니라고 하겠다. 〈조인성 記者〉

전업농 육성정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 조치

UR이은 농민층 분해 후속타

농업투자 등 전업농 육성정책 선행돼야

농지소유상환 완화, 투기 부채질 우려

사론

지난 4월3일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업농육성정책과 농지거래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업농육성정책의 경우, 농업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까지 농가인구를 총인구의 5%이내로 감축하며, 농업개방으로 필요없는 농지를 대폭 전용하여 농경지를 1백30만정보(1989년 2백13만정보)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제도개선방안은 이러한 전업농육성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3정보에서 5~10정보로 확대하며, 한계농지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매입해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하는 등 농지를 과감히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의 대폭적인 완화 등 농지거래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전업농육성정책이나 농지규제의 완화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업농육성정책은 1970년대말부터 시작된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개방농정의 일환으로, 수출의 댓가로 농업을 개방하며, 이로 인한 농업의 타격은 전업농으로 하여금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지규제의 완화는 이러한 농업정책을 뒷받침하고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용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정책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권역별농지보전제도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규제완화정책이 바로 그 구체적 표현이다.

농업의 개방화의 불합리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전업농육성정책과 농지규제완화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농지소유상한의 확대와 농가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가호당 경작면적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제경쟁력 있는 전업농의 육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작규모만을 놓고 볼 때 5~10정보의 농가가 50~100정보의 농가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인 농업투자와 농업보호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감소시키면서 오직 경작규모의 확대에 의한 전업농육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둘째, 농지소유상한을 완화내지 철폐한다고 하여 정작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농지소유 3정보 상한제는 농지개혁 당시 농업생산력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여 농가당 경작가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소유상한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작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농을 전업농(기업농)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농지소유상한을 완화한다하여 경작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농업수익성의 악화와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농업수익성의 악화와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농지를 구입해 보았자 농지구입자금의 은행이자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단지 지가상승에 따른 매매차액을 노리고 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비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농지소유상한을 완화하는 것은 농지투기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농지소유상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농업수익성과 농지가격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작면적은 쉽게 확대되지 않는다.

셋째, 농지의 전용규제완화는 토지투기와 비농민의 농지소유만을 부추키고 나아가 농업 자체를 파괴한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농지전용이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수익성의 악화로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로서는 이러한 농지전용의 제한이 못마땅할 수 밖에 없다. 농지가격이라도 오르면 이를 팔고 도시로 이주할 생각인데 농지의 전용제한으로 농지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욕구에 따라 농지전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농업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보상책으로 농지전용을 완화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또 농업부분을 축소시켜 농업개방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이다. 그리고 도시의 주택및 공장용지의 부족과 이에 따른 도시지가의 상승을 농지전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완화할 경우 농지투기에 의한 농지가의 상승과 비농민소유농지의 증가 등을 초래할 것이다. 농지가의 상승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농민들의 농지구입을 어렵게 만들며, 지대의 상승으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업농육성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고, 농지규제의 완화정책은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도시의 용지부족을 해결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호정책과 지속적인 농업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농지소유한도의 완화는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규제한 후에 실시되지 않으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가속화시킬뿐이다. 농지전용 역시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규제한 후 농업과 관련된 일정부분만 허용하여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용 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연구원〉

꿈·도전·성취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자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지 않는자 성취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선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여 —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한국화약그룹에서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신임사원 모집요강

21세기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인원 (250명)

모 집 분 야	인 원
상경, 법행, 인문기타(외국어, 교육, 부동산학 및 영업 : 전공불문)	250명
화공, 고분자, 화학, 공업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전산, 식품, 농생물, 수의, 축산, 낙농, 농학, 도시계획, 환경, 섬유, 이공기타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1차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모집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학사 · 석사 학위 기 취득자 또는 1991년 8월 취득예정자
나. 1991년 전역예정 또는 기 전역 ROTC및 육·해·공군 학사장교
다.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석사의 경우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소정양식) …… 면접용, 전산용 각1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통 (석사학위 이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다.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1통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1통 (보훈대상자에 한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 '91. 4. 10(수) - 4. 23(화) 매일 09:00-17:00(공휴일 제외)
나. 접수 : 그룹접수처 - 한국화약그룹 사옥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현암빌딩 1층 로비)
그룹안내전화 : ☎ 729-1114

■ 지방교부처

교 부 처	전화번호	주 소
제일화재 부산지점	463-2851~4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7번지
제주지점	53-5914~5	제주시 이도 1동 1789-3
〃 대구지점	252-4001~3	대구시 중구 종로 1가 41-35
〃 광주지점	223-1041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52
〃 마산지점	95-1201~5	마산시 양덕동 156-16
〃 대전지점	253-8666~7	대전시 중구 대흥동 202-3
〃 전주지점	88-7782	전주시 경원동 3가 38-5
〃 원주지점	47-0435~8	원주시 평원동 190-1.2.3
〃 청주지점	57-1011~3	청주시 우암동 111-16
〃 안동지점	57-2311~4	경북안동시 당북동 333-3

6. 기 타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되 차후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입사)를 취소함.
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법규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룹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國火藥그룹

■화 학 ●한국화약(주) ●한양소재(주) ●한양화학(주) ●한양바스프우레탄(주) ■에 너 지 ●유니온 포리마(주) ●경인에너지(주) ■무 역 ●골든벨상사(주) ■식 품 ●(주)빙그레 ■기계/전자 ●한국종합기계(주) ●한국정밀(주) ●고려씨스템산업(주) ●한국자동차부품(주) ■금 융 ●한국비커스(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제일증권(주) ●(주)제일경제연구소 ●삼희투자금융(주) ●제일투자자문(주) ■관광/유통 ●태평개발(주) (서울프라자호텔) ●(주)한양유통 ●서울청량리역사(주) ■레 저 ●한국국토개발(주) ■사회복지 ●천안북일학원 ■언 론 ●(주)빙그레이글스 ●(주)경향신문사